

## 투데이 칼럼

##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

**북** 한이 한국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엿새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을 끊고 복구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7차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북한은 2018년 5월 강도 폭파를 하면서 다시는 핵실험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핵 실험 모라토리엄 이었다.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6월 6일 날 간도를 다시 복구하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 위성으로 포착됐다. 복구는 두 달 정도 걸린다.

핵실험 날짜가 5월이면 잡힌다. 한국 대통령 취임 직후가 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전략적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시점을 택할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도 빠가면서 타이밍을 정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열병식 때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위협이라고 하기는 강도가 센 발언이다.

결국 한미동맹이 더 긴밀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때 정밀 타격과 사드 배치, 그리고 또 북한이 도발하면 버트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이는 북한에게 강하게 꽂혔을 것이다.

북한은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



정복규  
논설위원

이라는 점을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친서를 교환했다. 남북관계 개선 얘기도 꺼냈다. 핵 위협을 통한 압박, 또는 대화 중 어느 쪽에 방침이 있는지 촉각이 곤두섰다.

확실한 것은 투트랙 전략 즉 양면 전술이란 사실이다. 친서를 교환하면서 내용에 '그때 2018년에 우리가 참 친하게 지냈을 때가 좋았다는'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그로부터 보름 후에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담은 남북정상회담 회보집도 발행했다. 8

3페이지 분량으로 두껍게 냈다. 그러나 만약 남쪽에서 새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북한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전략일 것이다.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이라는 점을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재건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 30년 동안 해온 얘기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이다. 북한은 김영삼 정부 초에 NPT를 탈퇴했다. 북한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핵을 갖지 않으면 미국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면 그때 핵을 내려놓겠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북한이 말하는 소위 체제 안전보장 없이는 핵을 뺏을 수 없다. 이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압살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우려라는 표현을 쓴다.

북한이 미국을 겁내는 것은 일리

가 있다는 얘기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비슷하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해 주겠다 즉 '선 비핵화 후 경제 지원'이다.

비핵 개방 3000이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경제 개방을 하면 국제사회와 한국이 손잡고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천 달러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출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비핵화를 입구에서 먼저 보장 받고 들어 가려고 하면 일이 안 된다.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낮다.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미중 간등 영향도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반대급부가 분명히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다.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다.

북핵 문제 하나라도 풀어야만 종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의회를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국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북한과 비핵 문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대기를 주지 않고 그냥 압박으로 핵을 뺏어낼 수는 없다.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복귀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매각 상속까지 납부 연기를 허용한다.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 세도 가액기준과 새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 관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과 세제 적용을 최대 2년 유예한다. 이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 협조 없이도 무난히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정책의 일관

적이고 근본적 방향이 정립된 상태에서 그에 맞추어 부동산 세제가 개정되어야 한다.

그레이터 조세가 미봉책이 아

니라 진정한 기능을 다할 수 있

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

중하게 검토하여 무엇이 문제인

지를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사설

## 부동산 정책 전망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지하철 역에 대피 중인 하르키우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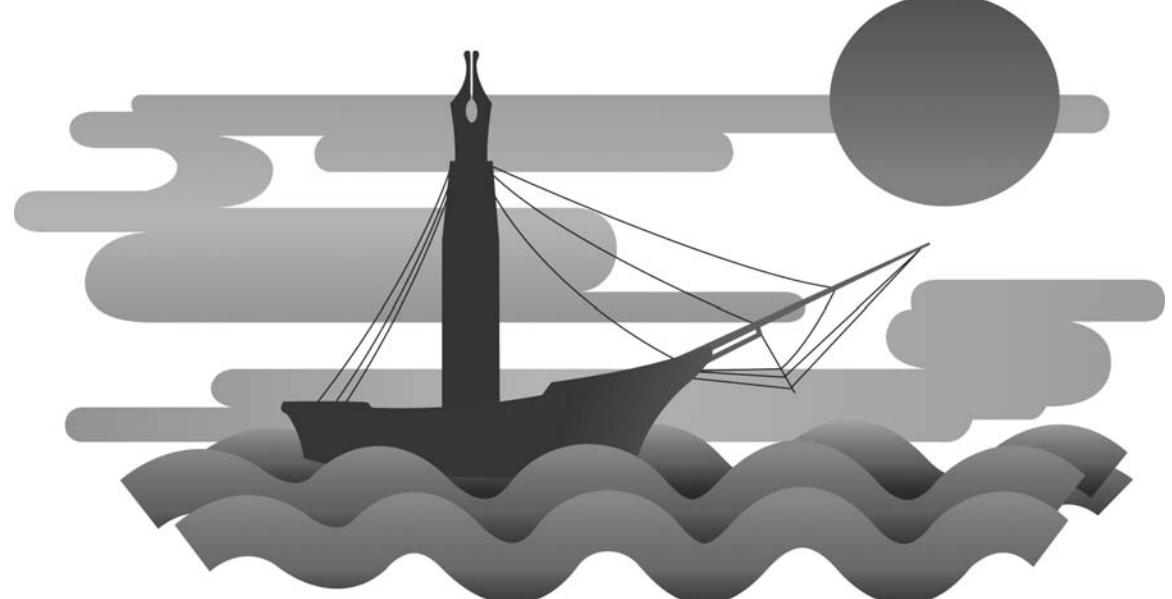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한 노인이 방공호로 사용 중인 지하철역 인을 걸어가고 있다.

## 행진하는 아르헨티나 반정부 시위대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